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센터

www.m-teacher.co.kr

vol.23 | 2018년 9월호

교육 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교육계가 뜨겁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독립 교과목 개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민주시민교육’은 대체 무엇이기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 해당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 일컫는다. 민주시민교육은 결국 이런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말하는 것. 최근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성폭력 △갑질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움직여야 하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교사들에게 아직은 생소하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엇을 주제로, 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오랜 시간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해 힘써온 영경미 경기 시곡중 사회교사로부터 민주시민교육 노하우를 묻고 들었다. 영경미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중학교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집필팀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집대성한 ‘선생님,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를 출간했다.

교육현장의 ‘민주시민교육’ 확산 위해 힘쓰는
영경미 경기 시곡중 교사

정치교육? 사회교과에서만 가능? “NO!”

영경미 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와 태도를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라면서 “수업은 물론 학교 문화 또한 민주적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등·존중의 가치 지향하는 것부터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 시민이 갖춰야 할 태도와 가치를 배우도록 하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가치’라고 하면 일단 ‘정치 참여’부터 떠올리기 쉽다. 투표, 집회, 결사 등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만이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다. 하지만 염 교사는 “평등·존중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 덕목”이라면서 “먼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보편적 인권 교육’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일까.

민주주의 사회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서로 대등하게 의견을 나누며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 이처럼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사회의 성립 자체가 가능한 것.

정치 참여는 그 다음이다. 염 교사가 학기 초에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수업부터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권을 다루는 수업에선 △국민 주권 △다문화사회와 세계화 △탈북자 인권 등의 주제를 비롯해 청소년 선거권, 학생의 인권과 학교 민주주의 등 학생 자신의 삶과 직결돼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도 다채롭게 다룰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들의 수업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이 염 교사의 주장. 예를 들어보자. 학생들은 학교의 두발 규제처럼 자신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를 찾아보며 인권 침해가 왜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깨닫는다.

나아가 ‘두발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등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해결책을 직접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인권 침해의 부당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본 학생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다른 사회적 약자의 입장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인권이 침해당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학생들은 여러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을 가진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염 교사)

“우리 사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보편적 인권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덕목을 쌓았다면,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앞서 정의한 것처럼 민주 시민은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사회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방법을 몰라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도 결코 해결될 수 없을까. 이에 염 교사는 최저임금, 청년실업, 미투 운동 등 굵직한 사회적 쟁점들을 수업 주제로 끌어들이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토론하도록 유도했다.

그런데 이는 염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가 ‘사회’라서 가능한 것은 아닐까? 국어·수학·과학 등의 교과라면 사회적 이슈를 수업의 소재로 삼기가 어렵지 않을까? 염 교사는 “그래서 해당 교과

와 사회적 이슈의 연결지점을 찾으려는 교사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이슈가 터져 나올 때 어떤 단원을 배우고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 쟁점은 반드시 이 단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야한다’는 정형화된 방식이 있을 수 없다. 이는 사회 교과에서도 마찬가지.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수업의 방향이 열려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투 운동이라는 이슈를 수업 소재로 삼으려 하는데 현재 ‘법’을 배우고 있다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다. 반면 ‘대중매체’ 단원을 배우고 있다면? 미디어에서 여성을 어떻게 다뤘는지 조사해볼 수도 있다.

다른 교과 역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국어 교과는 ‘쓰기’ 단원과 연결지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비혼 여성을 가상 인터뷰한 글을 써보거나, 수학 교과는 ‘통계’ 단원과 관련하여 대기업고위 인사의 남녀 비율을 산출해보는 식. 염 교사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려면 교사들이 평소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실 ‘밖’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교원들의 노력이 필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는, 또 모든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의 담당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오로지 사회 교과만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현실 속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노력은 ‘수업 밖’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학교 교육은 수업이 진행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가 학급을 운영할 때, 또 교사들이 학생들과 사적으로 대화할 때와 같은 순간에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업에서는 평등과 존중을 강조하면서, 막상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을 위계적으로 대한다면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염 교사는 “언제나 학생을 존중하고, 또 선배교사로서 후배교사를 배려하는 등 학교 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